

‘최고위원 출마’ 민주 한준호 의원 “고향 발전에 큰 힘 되고파”

“전북 출신 후보로는 유일... 호남 정치 복원 최선”

전북 전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재선)이 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았다. 도의회 의정실에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는 도중에 만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한 출마의 변과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전북출신으로 전북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Q. 전북출신으로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선전하고 있는데 도민들과 전북 당원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제가 유일한 전북 출신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제 고향 전북에서 이번에 특별히 큰 힘을 받고 싶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어 전북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대변하고,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크게 힘쓰겠습니다. ‘호남의 아들’ 한준호를 당선권 안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신다면 고마우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전북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벌써 결승지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Q. 이번 전북 선거에서 어떤 각오로 최고위원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각오와 판세를 뒤집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한준호 만큼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는 인식,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제대로 뒷받침할 사람이라는 평가가 당원들 사이에서 점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득표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당선권 박이기는 하지만 5위 후보와 불과 15표 차이 때문에 역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평소의 신념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기세를 몰아가겠습니다.

“전북 출신 힘 있는 정치인 필요
최고위원 되면 확실하게 챙길 것”

21대 국회서 순창·남원·장수
지나는 ‘달빛 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안 통과시키는 등 성과
22대 국회서 ‘대광법’ 통과 최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히, 제가 나고 자란 호남지역 곳곳의 투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전북 출신 후보, ‘호남의 아들’ 한준호를 더 큰 정치인으로 키워 더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호남 곳곳을 발로 뛰지 않고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Q.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출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지금 보수정권 내에서 전북에 대한 그릇된 정서와 인식이 만연합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느닷없이 ‘전북 비하’ 발언이 불거진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북 출신으로서 이 혐오성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를 촉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북 출신의 힘 있는 정치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최고위원이 되어 전북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각오를 세웠습니다.

Q. 그간 외지에서 고향 전북 발전

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인지요?

- 저는 전북 현안이라면 초선 시절부터 발 벗고 챙겨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는 국토위 교통 소위 위원으로서 순창과 남원, 장수를 지나는 ‘달빛 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토위 예결소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올해 국토부 소관 전북 지역 신규사업이 6건, 19.8억 원에 불과한데, 2025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이보다 더 큰 성과를 전북에 불러드릴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돌아야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다시 사람이 돌아옵니다.

전북 내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완주군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산업단지를 마

련하고, 현대차 공장을 비롯한 대기업이 입주해 일자리를 확충한 결과입니다.

전북의 경우 산단 미분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좋은 기업이 전북 내 산단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산단 진입도로 확충 등으로 교통접근성을 높이고, 노후 산단 개발 등 유관 사업에 탄력이 붙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Q. 대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에 전북만 사실상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여 전북의 권리를 챙기는 지도부 일원이 되겠다는, 호남 권리당원 33%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반기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현재 전북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

에 인접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2021~2040)’에서도 전북 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북 내 광역철도,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광역도로 등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서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광역교통법’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대도시권’ 안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김문덕 의원님이 지난 6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소재지인 경우에도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이 법안이 빠르게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전북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예 제가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토부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국토위에서 전북권의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 신규 예산의 국토부 예산이 전북에 19.8억 원밖에 담기지 않았단지 이처럼 전북의 소외되는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뿌리가 호남에 있습니다. 이 호남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기자

▶ 한준호 의원은?

1974년 전주 출생으로 우석고 졸업 후 연세대 학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로 공채 입사해 6년여 동안 활동하다가 편파방송에 대한 공정 보도를 위해 노조 집행부 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등 언론민주화를 위해 적극 투쟁하다가 2018년 문화방송을 그만두었다.

이후,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21대와 22대에 걸쳐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고양시 을에서 출마해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현재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형실장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후보를 보필해 신임을 얻었으며,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과 원내 대변인을 역임했고, 서민을 위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아나운서의 말하기 스피치, 말할 수 있는 비밀’ 등 3권이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전북 출신으로 출마한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전북 폼페이 발언 사과하라”

최근 열렸던 국힘 전대 관련
도내 한 시민 1인시위 나서

최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내 아나운서의 전북 폼페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전북의 한 시민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 시민인 K씨는 “전북의 시민으로서 전북이 소외된 것도 억울한데 무시까지 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반드시 하루빨리 전북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달 31일 오전에는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는 전통시장 사거리에서, 8월 1일 오전에는 경기장 사거리에서, 오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계속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전북 찾은 민주 민형배 의원 “호남 뭉 지키는데 최선”

“지역구 출신 최고위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자신의 성적이 좋지 못해 응원 해주신 전북자치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8명의 후보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출마한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로는 첫째,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이재명을 지키고 집권을 돕기 위해서이고, 셋째는 호남지역을 챙기고, 넷째 호남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반드시 대역전극을 펼쳐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대권을 탈환하여 전북의 권리를 챙기는 지도부 일원이 되겠다는, 호남 권리당원 33%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반기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 허가·신고 따른 불편 해소

민주 윤준병 의원,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경남·고창)이 1일,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내수

면 양식업을 위한 수산물 생산시설 설치는 반드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내수면 양식사업인들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물론, 최대 12년의 제한적인 사용기간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에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같이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면 어업인들을 비롯한 수산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태환 기자

SOC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요소 고려

민주 이춘석 의원, ‘도로법·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도시권역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도로나 철도건설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교통정책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



다. 지적이 있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균형발전 요소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로 및 철도의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만 할 뿐 직접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련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춘석 의원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 교통불편 해소 및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 등 소득기반 강화

민주 박희승 의원,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조립 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확대에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